

금융허브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2005. 6. 3.

차 례

I. 검토배경	1
II.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1. 추진실적	2
2. 종합적 평가	3
III. 추진방향과 전략	4
1. 명확한 추진목표의 설정	4
2. 금융정책의 추진 패러다임 전환	5
3. 성과위주의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 수립	7
IV. 앞으로의 추진계획	10
1. 견고한 금융 인프라의 구축	10
2. 선도 금융시장 및 업종의 출현을 통한 특화된 리더십 구축	23
3. 국제적인 Network 강화	50
V. 역동적인 추진체계 구축	56

I. 검토배경

- '03.12월 대통령님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금융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확정
 - 2007년까지 7대과제 실행을 통해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하고, 2012년에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를 완성 후,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 3대 금융허브로 발전

《 7대 추진과제 》

- | | |
|------------------|---------------------|
| ① 자산운용업 육성 | ② 금융시장 선진화 |
| ③ 지역특화 금융 개발 | ④ Global Network 강화 |
| ⑤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 ⑥ 규제·감독 시스템 혁신 |
| ⑦ 경영·생활환경 개선 | |

- 금융허브 정책을 추진해온 지난 1년여 동안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금융허브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인 공감대가 확산된 반면
 - 최근 들어서는 외국자본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제기되어 금융허브정책의 이해를 높이고,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모으고 이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
- 이에 따라 금융허브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한편 잘 된 점은 더욱 잘 되도록 하고, 아쉬운 점이나 잘못된 점은 시정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
 - 특히 추진 과정상의 드러난 문제점과 그동안의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추진전략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필요

II.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평가

1. 추진실적

7대 추진과제		주요실적	평가
1	자산운용업 육성	· 3개 투신사 구조조정('05.5) · 퇴직연금제 도입('04.12) · 간투법 개정('04.9)	- 자산운용업계의 신뢰회복 - PEF 활성화 필요
2	금융시장 선진화	· 중심지표채권 장기화 추진 (3→5→10년물) ·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면제('05.7)	- 장기채의 지속적 확대 필요 - 채권시장 국제화 저조
		· 기업지배구조 개선 · 거래소 통합('05.1)	- 거래소의 국제화 필요
		· 신규외환증개사(2개사)진입허용 · 개장시간 변경으로 외환거래 연속성 확보	- 외환시장의 지속적 자유화 필요
3	지역특화금융	· 동북아개발금융협의체 결성('04.5) · 선박투자 활성화(17개사)	- 관련 기반 조성에 주력
4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외국금융기관과의 상시 대화 채널 구축 · 증권사 신탁경영허용 등 대형화 기반 마련	- 외국금융기관들의 애로 해소 지원창구 필요
5	KIC 설립	· 한국투자공사법 국회통과('05.3) · 한국투자공사 출범('05.7.1예정)	- 당초 계획대로 추진 - 착실한 출범 준비작업 필요
6	규제·감독 시스템 혁신	· 민간 전문가 T/F 구성을 통한 금융규제 개선 (총 101건 중 43건 수용(42.6%)) · 서비스 중심 감독업무 및 시장 친화적 검사업무체제 확립	- 규제개선, RBS 시범실시 등 가시적 성과
7	경영·생활 환경 개선	· 외국인임직원 등에 대한 근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04.1) · 외국인 경영 및 생활환경 개선 작업 진행 중	- 사회전반에 걸친 인프라 개선작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 - 중·장기적 금융인력 양성 방안 마련 필요

2. 종합적 평가

□ 우리의 현실과 역량에 기초한 바람직한 추진전략 수립

-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정도, 인프라 및 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일정 부문에 주력하는 특화금융허브를 우선적인 달성목표로 삼은 것은 바람직한 대안

□ 7대 추진과제(49개 세부과제)를 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구축

- 2004년 대상과제 21개 중 21개를 예정대로 추진 완료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정비, 증권사 업무영역 확대, 채권시장 중장기물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

□ 금융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외국금융기관의 한국진출이 가시화 되는 등 시장발전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Fidelity** 진출, Societe Generale의 IBK-SG 자산운용사 설립 등은 금융허브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
- '04년 기준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전년대비 16.1%, 채권발행잔액은 8.9% 증가하는 등 금융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
-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투자 비율확대 및 적립식 펀드 도입 등으로 펀드시장이 활성화되어 자산운용업 발전의 토대 마련

* 펀드수탁고잔액 : 174.9조원('02) 145.0조원('03) 187.0조원('04) 197.8조원('05.4)

Ⅲ. 추진방향과 전략

< 기본방향 >

기존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 로드맵을 토대로

- ◆ 금융허브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
- ◆ 국내시장의 범주를 넘어서 글로벌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는 등 금융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
- ◆ 기존 7대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선도 금융시장과 업종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육성(성과가시화 ⇒ 추진동력 확보)

1. 명확한 추진목표의 설정

- 단계별로 금융허브 달성의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뚜렷한 방향성과 업무추진의 추진력 확보
 - 금융허브의 달성 정도는 국가마다 지향하는 목표가 상이하여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타 금융허브의 사례를 감안하여 가급적 객관적인 수치로 제시토록 노력
 - 기존 금융허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에서 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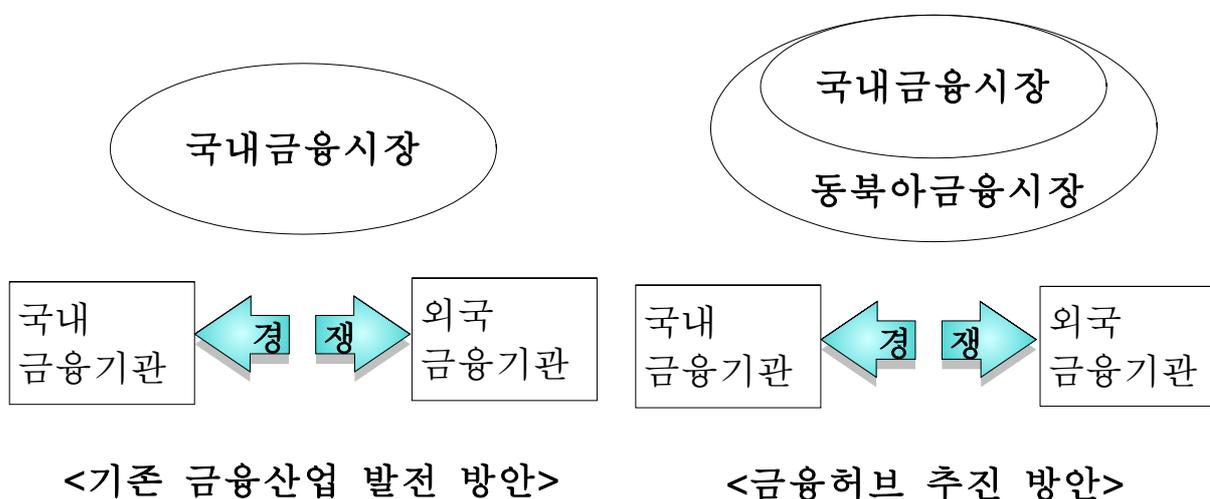
금융허브 추진목표

구 분	비 고
금융시장의 선진화	부문별 시장규모 및 거래규모 확대
금융거래의 국제화	국내·외 금융시장간 활발한 거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국내·외 금융기관의 상호진출

2. 금융정책의 추진 패러다임 전환

□ 경쟁시장의 지역적 확장

- 기존의 금융산업발전방안은 국내금융시장이라는 한정된 시장을 전제로 국내·외금융기관이 경쟁하는 모습을 상징
- 금융허브 관련정책은 확대된 시장(동북아 또는 글로벌마켓)을 전제로 국내·외금융기관이 경쟁하는 모습을 상징



□ 한층 더 격화된 경쟁을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

- 기존의 금융산업발전방안은 국내·외 금융기관간 점진적 경쟁원리를 도입
- 금융허브 정책은 다수의 외국금융기관의 시장참여로 인한 보다 심화된 경쟁을 통해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 추진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선도분야 집중

- 기존의 금융산업발전방안은 금융업종간 균형발전에 중점
- 금융허브 정책은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금융허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금융기관을 적극 유치 노력

□ 적극적 개방에 의한 외국금융기관 유치

- 기존의 금융산업발전방안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유치를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노력 하지는 않았던데 반해
- 금융허브 정책은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금융허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금융기관을 적극 유치 노력

금융정책 추진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

구 분	기존의 금융산업 발전방안	금융허브 구축방안
시장참여자	국내·외 금융기관	좌동
경쟁시장	국내금융시장	국내시장+동북아금융시장
외국금융기관 시장진입	소극적 개방	적극적 개방
경쟁방식	· 국내산업보호를 염두에 둔 국내·외 금융기관간 동등경쟁 · 점진적 경쟁원리 도입	· 국내·외 금융기관간완전 동등경쟁 · 한층 더 격화된 경쟁을 통한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
발전전략	금융업종간 균형발전	선도금융업종 주도의 발전 (「선택과 집중」)

3. 성과 위주의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 수립

< 기본방향 >

- ◆ 금융활동의 기초가 되는 외환제도, 감독시스템·금융규제를 타 금융허브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참여자가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견고한 금융인프라 구축)
- ◆ 이러한 토대 하에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선도금융분야(자산운용업, 구조조정시장 등)가 부각될 수 있는 기반을 집중적으로 조성함으로써 후방효과를 통해 외환, 주식, 보험산업 등 금융산업 전반을 견인
- ◆ KIC출범에 따라 확대된 국제적 Network를 통해 다수의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 진출을 유도하여 한국이 동북아 금융시장의 중심이 되는 금융허브를 구축

가. 금융인프라 개선

- 외환제도, 금융규제, 금융감독, 경영·생활 환경 등의 금융인프라를 OECD 및 타 금융허브 수준으로 개선
 - 기존의 7대 과제는 대부분 금융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에 관한 사항으로써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

나. 선도시장과 선도업종의 출현을 통한 특화된 리더십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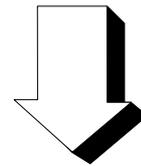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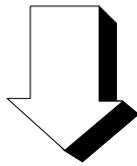
-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과 업종을 우선적 대상으로 하여 금융허브 구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노력
- 우리나라가 구조적인 강점을 지닌 분야를 중심의 특화된 리더십을 구축함으로써 본격적인 금융허브로의 발전을 위한 초석 마련
- 타 금융허브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선도부문을 앞세워 그 성과가 타 분야로 확산(spillover)되게 하는 차별적 전략을 추진

다. 국제적 Network의 확대를 통한 외국금융기관 유치

- 그간 소홀했던 국제금융계와의 교류 및 국제적 Network 구축을 통해 국제금융업계의 관심을 높이고 외국금융기관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 시장논리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실행을 통해 우리정부가 금융허브 구축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메시지 전달
- 외국금융기관의 다수 진출을 유도하여 명실상부한 금융허브로서의 위상 제고

금융허브 전략 개념도

국제적 Networking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금융기관 유치



< 선도시장 · 업종 >
- 선택과 집중 -

< 견인시장 · 업종 >
- 후방효과를 통한 확산 -

- 채권시장 (자산유동화시장 포함)
- 구조조정시장
- 파생상품시장
- 자산운용업
- 투자은행 (IB)
- 사모펀드 (PEF)

- 주식시장
- 외환시장
- 보험사
- 상업은행



외환제도 혁신

금융규제 철폐

금융감독 개혁

경영 · 생활 환경 개선

금융 인프라 구축

IV. 앞으로의 추진계획

1. 견고한 금융 인프라의 구축

가. 외환시장 규제완화

외환거래법의 Negative System을 확립하여 자본시장 발전 뒷받침

- 외환분야는 금융허브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 국가간 자본거래의 Transaction Cost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금융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면적인 개편 추진
- 외환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negative**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외환시장 모니터링 기능 강화와 병행)
 - ①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이 가능한 금융허브 지원방안은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
 - 「유입촉진·유출억제」 외환정책 기조 완화
 - 불법자본이동에 대한 감시역량 강화
 - 외환규제 red-tape의 폐지
 - ② 자본거래 허가제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금년 하반기 중 관련법령 개정
 - 허가제 폐지에 따라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계, 연구계 전문가들로 T/F 구성
 - T/F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외환자유화 세부추진일정 마련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간 자금운용 활성화

【현행 제도】

- 본지사간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국내본사 명의의 해외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 부족한 해외법인에 대여 (**Global Cash Pooling**)하기 위해서는 **한은허가 또는 신고필요**
- 다국적 기업의 경우 수시로 본지사간 자금이체의 필요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제한으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움

<참고 : Global Cash Pooling>

- 본사와 해외법인간(자금잉여법인과 부족법인) 日別 자금공유를 통하여 법인의 유동성 위험을 축소하고, 해외금융기관에 지불하는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자금관리시스템

【개선방안】

- 다국적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하여 본지사간(외국인투자기업 포함) 운전자금 대출을 **일일 1천만불 한도내에서 자유화**
- 다만 사후관리측면에서Global Cash Pooling에 참여하는 현지 법인 명단, 대출한도 등의 적정성을 한국은행이 최초로 심사하고 거래내역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사후 정기보고를 의무화

지급증빙서류 제출부담 경감

【현행 제도】

- 수출입대금의 지급 및 영수시 건별로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
 - 지급증빙서류의 작성 및 보관 등으로 기업의 인력수요를 유발하고 절차의 지연에 따른 행정적 비용을 초래
 - 또한 기업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이용한 무역업무 자동화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저해

* EDI : 종이문서를 전자식 문서로 대체한 것으로서, 기업간 거래서식 등을 상호간에 합의한 통신표준에 따라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교환하는 전자자료교환 시스템

【개선안】

- 전년도에 수출입 규모가 각각 1억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 방식 수출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
 - 다만, 거래에 따른 실물이동을 수반하지 않아 사후 추적관리가 어렵고 불법 외화유출 우려가 큰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
-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 기업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3년) 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보완조치를 마련

거주자의 대출채권 매각제한 완화

【현행 제도】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대출채권 매매는 한은신고 사항임
 - 다만, 수출관련 외화채권을 외국 금융기관에게 매각하거나 일반 외화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동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즉시 회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불필요
- 최근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제3자에 대한 단순대여금 또는 연불 수출채권 등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이 경우 현행 외화채권 매각대상 제한(외국에 있는 금융기관) 또는 매각자금의 국내 즉시 회수의무 등으로 인해 대출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는데 애로요인으로 작용

【개선안】

-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차원에서 거주자의 수출관련 외화채권의 매각대상 제한(외국에 있는 금융기관) 및 매각자금의 국내 즉시 회수조항을 폐지

외환자유화의 조기 완료

□ 정부는 단계적인 외환자유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2차에 걸쳐 외환자유화를 단행하여 외환제도 자유화조치를 대부분 마무리하였음

○ 1단계*로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고,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System)'으로 개편('99.4월)

*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제정('98.9월)

○ 2단계로 여행경비·해외이주비의 한도폐지 등 개인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대폭자유화('01.1월)

* 자본의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신고·보고·확인 등 일부 절차적 제한은 존치

⇒ 다만, 급격한 투기성 자본이동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방지 및 외환모니터링을 위하여 일부 핵심적 사항*에 대한 자유화는 유보

* 헤지펀드등의 환투기 공격에 이용될 수 있는 비거주자의 원화조달, 외화유동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재무불건전기업을 단기외화자금차입 등

□ 정부는 이후 「외환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02. 4월)하고, 이에 따라 외환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

○ 「외환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르면 외환자유화는 제3 단계('09~'11) 중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보다 앞당겨 조기에 완료할 예정

*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에서 외환 모니터링의 강화 및 random check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

- 이는 외환거래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선진통상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의 외환자유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목적

<외환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 제1단계('02~'05) : 자본거래 허가제 등의 제한은 존치하되
절차적 제한완화

◆ 제2단계('06~'08) :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등 잔존제한 대폭
축소

◆ 제3단계('09~'11) :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외한 외환제도의
완전자유화

그 간의 외환자유화 추진경과

자유화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외환자유화 (’99.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관련 외환자유화 · 기업 외화차입 및 금융기관 해외직접투자 등 제한 완화 · 자본거래를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System)로 전환 ·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도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지급정지, 자본거래허가제, 외환집중제 등 	
2단계 외환자유화 (’0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외화송금거래 등 잔존 외환규제 자유화 ·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증여성송금 등의 지급한도 폐지. 다만 고액대외지급은 한은신고 	
외환제도 증장기 발전방향 (’02.4.20)	제1단계 (’0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제도의 기본틀 유지 및 절차적 제한 완화 · 자본거래의 허가제 및 신고제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 대외지급관련 한은신고제도 폐지(’02.7월) - 비거주자의 원화차입한도 확대 - 거주자의 해외차입·외화증권발행신고 한도액(3천만불) 상향조정 등 · 무역거래관련 다자간 포괄상계 허용 등 결제방법 간소화 등
	제2단계 (’06~’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등 잔존제한 대폭 축소 · 허가제 폐지 및 신고(수리)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재무불건전기업 단기차입, 장외 신용파생거래 등 ·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 폐지 · 지정거래은행제 폐지 및 외국환은행의 자본거래에 대한 확인의무 면제 등
	제3단계 (’0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외한 외환제도의 완전 자유화 · 대외채권 회수의무제도 폐지 · 자본거래 신고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재무불건전기업 단기차입, 장외 신용파생거래는 신고제 유지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 폐지

나. 금융규제체계의 전면적 개편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

- 금융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
 - 금융규제 개혁의 상시 채널을 마련하여 미등록규제를 포함한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금융수요자의 규제 체감도를 개선
- 실질적인 금융통합법 1단계 작업의 일환으로 기능별 규제개혁 추진
 - 통합법 추진의 1단계 작업으로서 현행 법령상의 금융규제를 기능별로 전면 재검토하여 업종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
- 「Zero-base 규제개혁 T/F」를 구성하여 추진
 - 각 과별로 소관법령을 2~4개 정도로 **Grouping**하고, 그에 맞추어 금감위(원), 관련 협회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
 - 기존의 금융허브 민간 T/F와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 점을 감안 금융허브 민간 T/F 기능을 흡수하여 확대·개편
- T/F의 작업방향
 - ① 미등록규제를 포함, 모든 규제를 List화
 - ②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zero-base에서 재점검
 - 규제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Global standard에 부합되게 개선
 - ③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하에 업역간 규제의 형평성 제고

④ 재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마련(존치·개선·중장기 검토로 구분)

⑤ 조치계획에 따른 실행

- 발굴된 과제는 관련 법령 등의 개정소요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개선, 나머지는 향후 금융법 통합시 반영

통합금융법 추진 계획

-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가 큰 자본시장관련 법률의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전체 금융법 통합은 추후 추진
- 자본시장과 증권·자산운용업 등 투자업(Investment Business)의 획기적 발전(Big Bang)이 필요한 시점
 - 자본시장과 투자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IB)의 출현을 유도할 필요
- 투자업의 '업무영역'과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체제를 원점에서부터 정비할 계획
 - 기능별 규율(Functional regulation)체제를 도입하고,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모든 투자업무와 투자상품의 취급을 허용하는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전환
- 현재 T/F를 구성하여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령의 통합작업을 진행 중
 - 금년말까지 방안 마련

다. 금융감독행정 혁신의 지속적 추진

「전문성·도덕성」을 갖춘 봉사하는 선진 금융감독기구 확립

-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독체제 확립
 - 금융산업 및 금융회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본격 가동하고, 이를 감독 및 검사에 효율적으로 활용
 -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RM)을 통하여 각 금융회사 리스크의 규모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 시장친화적·선진적 검사체제 구축
 - RM제도의 정착 정도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장검사를 축소
 - 현장검사 종료 후 검사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검사원의 검사태도, 검사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검사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
 - 금융회사가 취약·문제분야에 대해 금감원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 청구제도를 도입
- 이해관계인의 참여 확대를 통한 감독행정의 투명성 제고
 - 금융수요자가 감독당국에 정기 또는 수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업계패널 및 소비자패널을 제도화
 - 정책수립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외국 금융회사의 의견 수렴을 위한 외국 금융회사 CEO와의 정례간담회 지속 운영
 - 감독행태에 대한 여론 평가를 정기적(연1회)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대내외에 공표

□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

- 자문수요가 많은 리스크관리, 법규, 회계분야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서비스 제공
 - * '04년중 금융회사 대상 자문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리스크관리(35.7%), 법규(22.4%), 회계(13.3%) 분야가 전체의 71.4%를 차지
- 법규위반여부 불분명시 제재 등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표명하는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제도를 도입·운영
- 영문 홈페이지 개편 등을 통하여 외국 금융회사 및 투자자의 금융감독정보 접근 용이성을 제고
- 금융교육 시범학교 지정 및 지원, 금융협회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교육 기회를 확대

□ 감독당국의 역량 강화 노력 지속

- 각종 제도개선 및 금융허브 추진관련 자문, 선진금융기법 교육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 Consultant」 위촉·활용
- 금융감독 개선관련 자문 및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감독업무자문단(International Regulatory Advisory Group)」 구성
 - * 외국의 학계인사, 국제금융기구·외국감독기구 고위직 경력자를 고문으로 위촉
- 양자간 양해각서(MOU) 체결국가를 확대하고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의 가입을 통하여 외국 감독당국과의 교류·협력 강화(교육훈련 프로그램 포함)
- 윤리경영 수준에 대한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통하여 윤리경영 강화

라. 금융 관련 경영·생활 환경 개선

비용수반 없이 제도개선을 통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부터 추진하고 금융허브관련 생활환경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점차 확대

(1) 도심접근성 제고

□ 국제공항의 도심접근성은 금융허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

- 서울의 경우 홍콩 등 역내 경쟁도시와 비교하여 인천공항에서 도심까지의 접근수단이 단조롭고 많은 시간 소요

	동경 나리타공항	상해 푸둥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서울 인천공항
도심과의 거리	약 60km	약 50km	약 34km	약 60km
열차종류	철도/전철	자기부상열차	철도	철도(2010년 개통)
운행구간	공항~동경역	공항~룽양루	공항~센트럴역	인천~김포~서울역
운행방법	일반	직통	일반	직통/일반
운행소요시간	60~85분(철도)	6~7분	23분	40분/50분
	56~98분(전철)			

□ 공항의 도심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편 확충에 주력

- 『인천국제공항철도』가 2010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나 정차역이 많고 소요시간도 많아 경쟁력이 떨어짐
 - 또한 서울역을 종착역으로 하고 있어, 여의도 및 강남으로의 접근을 위하여 별도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
-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을 직접 연결하여 여의도 및 강남지역의 접근편리성을 제고(1시간 이내)

*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용역 수행 ('04.7.8 ~ '05.7.7)

(2) 입국사증 및 출입국 관리 개선

- 금융기관 종사자와 제조업체 노동자를 동일한 법적 선상에서 취급하여 고급 비즈니스 인력의 유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고급 비즈니스 인력인 금융업 종사자를 불법체류 위험이 있는 단순 노무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취급하는 모순 발생
 -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 보유비자의 80% 이상이 체류기간 1~2년으로 빈번한 갱신을 요구받고 있음
 - 외국인체류관리에 있어서도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업종내 이직이 빈번한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불편 초래
 - 금융업 종사자 등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하여 비자 및 체류 관리상 우대조치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법무부와 협의 필요)
 - 현재 산자부, 정통부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각기 실시되고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우대조치를 재점검하여 금융업을 포함한 첨단기술인력의 국내유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
- * 상해는 외국인투자자의 체류기간에 대해서 금융업을 우대(일반업종 1년, 금융업종 2~5년)

(3) 금융클러스터(집적지역) 선정 문제

- 금융허브로서 집적효과를 최대화할 필요
 - 건물형태(홍콩·상하이·두바이 IFC 등), 지역형태(뉴욕 “맨하탄”, 런던 “시티” 등)의 대안을 중심으로 검토

2. 선도 금융시장 및 업종의 출현을 통한 특화된 리더쉽 구축

- ※ 동북아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① 우리나라에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외국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 신규로 진출할 만큼 매력적 이거나, ②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도시보다 비교우위가 있어 기존 영업기반을 이전해 올 상황이 되어야 함

가. 선도 금융시장의 효율적 성장기반 구축

◆ 이러한 관점에서 가능성이 있는 선도 금융시장

- 채권시장 : 일본, 중국에 이어 아시아 제3위의 시장규모와 세계수준의 산업보유 등 성장잠재력도 갖추고 있으며, 자산운용업, 증권업 등 타 금융산업의 투자 대상 시장을 제공하여 선도효과도 큰 시장
- 구조조정시장 :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축적된 경험과 인적·제도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방대한 시장기회의 활용이 가능한 분야(상대적으로 비교우위 탄탄)
- 자산유동화증권(ABS)시장 :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시장이 클 뿐 아니라, 상품다양성과 구조설계 능력면에서 아시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분야
- 파생상품시장 : KOSPI 200 선물·옵션이 각각 세계 4위, 1위 수준으로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위험헷지 기능을 제공하여 금융공학 발전에 기여

◆ 선도 금융시장이 타 금융시장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

- 금융허브 추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선도 분야를 선정·발전시킴으로써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선도금융 분야가 앞서 발전해 나감으로써 후방효과에 의해 타 금융부문의 발전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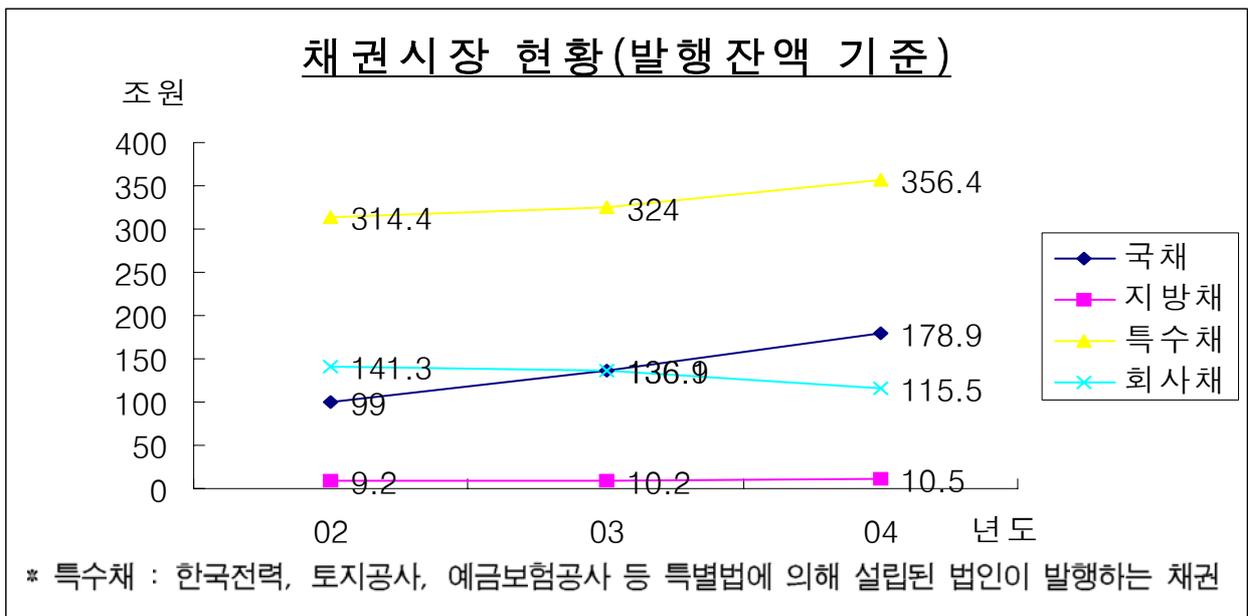
(1)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현황

- 채권시장은 일본, 중국에 이어 아시아 3위 규모로서 자산운용업 육성 등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절대적 규모가 작고 시장저변이 취약
- 2004년말 현재 채권 총 발행잔액 661.3조원(전년 대비 8.9% ↑)으로 발행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국채의 경우 발행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경제규모 대비 국채발행규모가 OECD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

* 국채/GDP('03말, %) : 한국 19.5, 미국 45.7, 독일 42.6, 영국 28.4

- 회사채의 경우 발행물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



문 제 점

- ◆ 채권시장은 시장별로 문제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
 - Market Making 기능을 가진 Dealer의 부재로 Broker 위주의 시장구조
 -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불투명한 장외거래(OTC) 위주로 인해 신규시장 참여자(특히 외국인)의 진입이 곤란

① 국 채 시 장

- '04년부터 10년만기 국고채의 발행을 확대(20% → 30%)하는 등 장기채 물량을 확대하고 있으나 다양한 만기와 수익률을 가진 채권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
 - 특히 10년 초과 초장기채가 아직 발행되지 못해 수익률 곡선 (Yield Curve) 미완성

② 회사채 시장

-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부채축소 노력과 최근 신규 투자 수요 부족으로 발행 수요 자체가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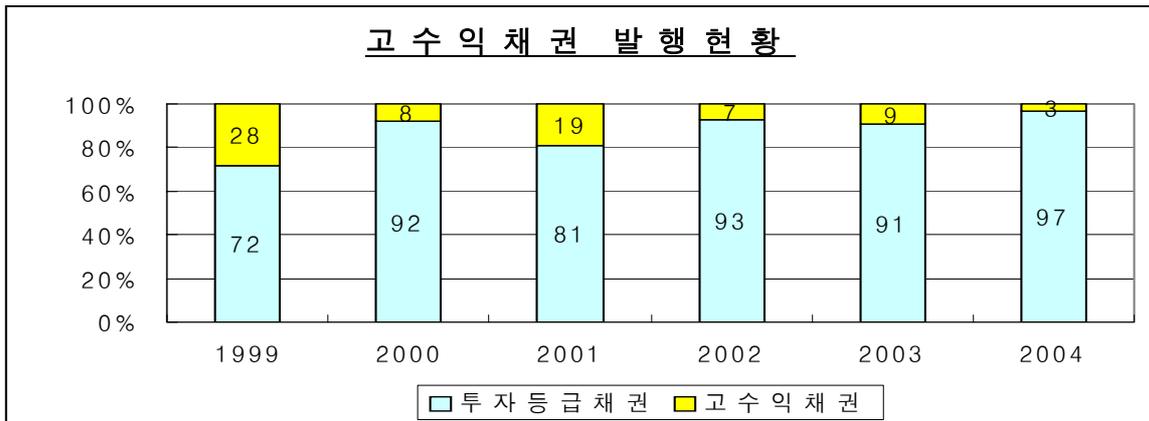
* 회사채 발행잔액 141.3조원('02년) → 115.5조원('04년)

- 최근 회사들의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투기등급 (BB)이하의 기업 수가 대폭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credit rating도 없어 발행 및 투자수요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등 투기등급 이하 회사의 회사채 시장은 사실상 형성되고 있지 않는 실정

회사채 등급별 분포현황

등급 \ 일자	2003. 1. 1.	2004. 1. 1.	2005. 1. 1.	2005. 1. 12
AAA	25	29	30	33
AA	34	25	30	29
A	56	66	64	74
BBB	89	85	93	92
BB	51	25	24	25
B	19	21	18	19
CCC이하	3	3	8	4
투자등급	204	205	217	228
투기등급	73	49	50	48
합계	277	254	267	276

* 한국기업평가 자료(기준일 현재 채권을 발행한 업체만 대상)



- 투자자들의 만기보유관행("Buy and Hold" 전략)으로 인해 발행 즉시 시장에서 퇴장하는 등 유동성이 극히 낮은 편 (만성적 수요우위)

* 채권별 회전율 현황(단위 : %): 국고채 858.6%, 회사채 60.2%, 통안채 291.9%, 금융채 132.3%, 특수채 42.3%

- 투자자의 경우에도 우량채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위험회피 성향으로 인해 BB이하의 정크본드에 대해서는 투자를 기피 (회사채시장의 양극화)

③ 채권시장의 국제화

○ 비거주자의 원화채권(아리랑 본드) 발행실적이 지극히 저조하여 채권시장의 국제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 2002년 당해 년도 비거주자 채권발행액은 US\$2억 수준(홍콩 US\$230억, 싱가포르 US\$51억)임. ADB, IBRD 채권발행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 기업의 해외현지 법인이 발행한 것임

- 현재 한국의 S&P 신용등급은 A-로 이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은 한국시장에서 회사채 발행 유인이 없음

* 채권 발행시에는 국가신용등급이 채권 등급의 상한선(ceiling)이 됨

- 한국신용평가회사들은 Default시 청구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외국기업에 대해 실제보다 낮은 신용등급 부여

- 또한 발행절차가 복잡*하고, 발행비용이 높아 외국인의 원화채권 발행 유인은 거의 없는 상태

* 공시 관련 서류에 타국과 다른 상세한 비공개 정보 포함(예, 임원진 재무보증), 정형화된 채권거래수탁약정서 등

○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는 40%를 넘는데 반해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규모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소위 **“Bond market puzzle”** 현상 존재

* 외국인보유비율 : 0.09%('01) 0.11%('02) 0.29%('03) 0.48%('04)

- 환리스크는 큰 데 반해 국내조달 금리가 국제 금리에 비해 경쟁력이 없으며, 원화의 국제화가 안 되어 유동성 문제도 있음

국채 금리 비교(5. 31 현재)

	3년물	5년물	10년물
미국	3.75%	3.88%	4.13%
한국	3.67%	3.81%	4.31%

○ 제도적으로는 외국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신용평가기관이 부재하여 외국투자자가 믿고 투자하기 어려운 측면

향후 추진계획

- ◆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정부가 시장의 Initiative를 쥐고 있는 국채시장의 활성화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고 추진
 -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채권시장의 기반을 착실히 갖추어지면 확산(spill over)효과를 통하여 채권시장 전반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 회사채 시장의 부진은 현 경제상황과 기업의 재원조달 형태의 변화 등 주로 시장요인에 기인하므로, 단기간내에 활성화되기 어려우나 시장여건 호전을 전제로 각종 제도적 장치 등 인프라 개선에 주력
- ◆ 외국인의 원화채권 발행 등 채권시장의 국제화는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추진과제로 판단하여 조달비용의 인하 등 제도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외국 신용평가사의 국내 진출 확대 등 외국인 채권투자 기반을 착실하게 조성(성장 잠재력 확충)

① 국 채 시 장

□ 국채의 수요기반 확대

○ 국고채 발행 확대

- 외평채·차입금의 국고채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 국채발행 수요가 있을 경우 국고채 발행을 원칙으로 함

○ 국채 STRIP*(원금이자 분리거래) 제도의 도입

* 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

- 다양한 만기의 무이표채 공급을 통해 **상품 다양화** 및 **유동성을 제고**하고 국채의 분리/재결합을 통한 차익거래 등을 통해 투자·거래기법의 **선진화** 가능

○ 물가연동국채(Inflation-Linked Bonds)의 발행 검토

- 국채의 원금과 표면금리를 물가에 연동시켜 실질가치를 보장함으로써 물가변동위험(inflation risk)을 상쇄(hedge)
- 명목국채보다 낮은 금리의 국채발행 가능, 장기 투자자 수요 충족, 경제정책 관련정보(예상물가상승율·실질이자율 등) 확보

□ 장기채시장의 육성

○ 향후 10년 초과만기 국고채 발행 및 장기채 가격변동위험 헤지를 위해 10년 국채선물 상장 추가 검토

- 10년물 국고채는 금리변동에 대한 가격 변동폭이 큰 반면 Risk 관리수단이 없어 딜러들이 취급을 기피하는 실정

* 현재 상장된 국채선물은 3년물('99.9월), 5년물('03.8월)에 한정되어 있으며, 3년물은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반면에 5년물은 시장 형성이 극히 미진한 상황

□ 국채유통시장의 활성화

○ 국채전문딜러(PD)의 시장조성기능 강화방안 마련·추진

- 국채인수권한이 PD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소수의 딜러를 중심으로 **PD 기관수를 축소**

* 현재 PD 기관수: 22개(은행 11, 증권사 11)

- PD의 자기매매(딜링)용 국고채 보유규모한도(현재 평잔 1,000억원) 확대 검토

⇒ 능력있고 적극적인 **Market Maker** 육성

② 회사채 시장

□ 고수익채권관련 인프라의 구축

- 정크본드의 위험분산을 위해 **pooling** 등을 통한 신용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을 개발 검토
- CB(Credit Bureau) 설립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조회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의 스펙트럼 형성 기반 조성

③ 채권시장의 국제화

< 비거주자의 원화채권 발행 활성화 >

- ◆ 한국의 신용등급, 발행비용 등 주로 시장요인에 의해 비거주자의 원화채권 발행 유인이 거의 없는 실정
- 다만, 제도적인 걸림돌을 개선함으로써 추후 외국기업들의 아시아 지역내 주요 채권발행 센터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할 필요

□ 비거주자의 원화채권 발행 절차 개선

- 비거주자의 원화채권 발행 관련제도 등을 전면 조사·검토하여 개선 가능성 여부를 조사
-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아 표준무보증사채수탁계약서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검토
- 채권발행절차의 단순화 및 안내 매뉴얼 발행

<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활성화 >

- ◆ 낮은 금리, 환리스크 부담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가 단기간 내에 대폭 확대되기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실정
- 시장여건이 개선될 경우 외국인들의 국내채권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필요

□ 국채선물에 대한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면제증권 취득 추진

- 미국내 투자자들이 우리 증권선물거래소의 국채선물·옵션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면제증권(Exempted Securities)* 취득신청을 추진(증권선물거래소)

* 단, 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교란 방지책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

- 면제증권 지정시 국채 투자기반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외국인의 참여확대에 따른 국채선물시장의 유동성·효율성 제고
 - 국채 현·선물 시장과 국가의 대외 신인도 제고에 기여
 - 현·선 연계거래 등을 통해 현물시장의 투자자 기반확대 및 국제화에 기여

□ 해외 우수 신용평가회사들의 국내 시장 진출 촉진

- 현재 Moody's, Fitch, R&I 등이 국내 신용평가사와의 합작형태로 들어와 있으나 선진평가기술 이전효과(Spill-over) 등이 미흡한 실정
- 해외 우수 신용평가사들의 국내진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평가업 진입요건의 일부 완화 검토

③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

- 직접 금융시장에서 채권에 이어 2위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식시장보다 큰 역할

* '04년 직접금융 자금조달액 58.7조원중 회사채 34.2조원, ABS 16.2조원(사모사채 등 제외), 주식 8.3조원

직접금융 자금조달실적과 ABS발행실적

(단위: 조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직접금융 실적 ¹⁾	99.4	86.8	72.9	58.7
- 주 식	12.2	9.3	11.1	8.3
- 회사채	87.2	77.5	61.8	50.4
(ABS사채) ²⁾	39.6	29.0	27.7	16.2
직접금융대비 ABS사채비중	39.8%	33.4%	38.0%	27.6%

1) 유가증권신고서 제출(공모) 기준

2) ABS발행총액에서 사모사채, 유동화출자증권 및 수익증권 제외

- 한국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정(1998)을 통해 ABS 시장이 형성되어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제반 법률 인프라 구축
 - 다른 나라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는 **ABS시장의 허브로 성장 가능**

* 실적면에서는 일본과 더불어 아시아 최고 수준이며, 상품다양성, 구조설계 능력면에서는 일본보다 우위인 것으로 평가

- 금융기관 및 일정 신용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발행주체 확대 등 일부 시장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 점을 개선하고 타 국가에 제도 수출 등을 통해 자산유동화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추진

(2) 구조조정시장 활성화 방안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처리 및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구조조정 제도가 정비되고 관련 인적자원이 축적
 - 상품다양성, 구조설계 능력 및 구조조정기구 발전단계에서 일본·중국 등 주변국보다 우위에 있으며
 - 향후 아시아 구조조정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구조조정기구의 발전단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1단계	KAMCO	RCC	4개 AMC	RTC
2단계	CRC, CRV M&A Fund	IRCJ	-	Vulture Fund, Corporate Restructuring Fund
3단계	PEF, IB	PEF, IB	-	PEF, IB

주) RCC(The Resolution and Collection Corporation), IRCJ(Industrial Revitalization Corporation of Japan) : 일본의 공적 구조조정기구, AMC(Asset Management Company) : 중국의 공적구조조정기구, RTC(Resolution Trust Corporation) : 미국의 공적구조조정기구

- 외환위기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중국과 일본의 경우 방대한 규모의 잠재적인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 잠재적 부실채권 규모(추정) : 중국 3,070억불, 일본 3,300억불
 - 북경올림픽(2008년) 이후 중국경제가 경착륙(hard-landing) 할 경우 중국의 구조조정시장이 현재화할 가능성도 제기됨
- 우리나라 구조조정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구조조정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역량을 강화할 필요

추진과제

- ◆ KAMCO 주도로 구조조정 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
- ◆ 동북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를 적극 육성
- ◆ CRC 등 구조조정 관련제도의 적극적인 수출을 통해 관련국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

□ 우리나라를 동북아 구조조정시장의 허브로 육성

- 구조조정허브는 실제 구조조정 거래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시장으로서 다수의 구조조정기구, 자금수요자, 자금공급자, 그리고 정보가 집중되는 구조조정 활동의 중심지를 의미
- 한국 구조조정시장은 현재 3~4단계 정도까지 발전되어 있고 동북아 구조조정시장 허브구축은 5~6단계로 이해할 수 있음
- 국내 구조조정시장에서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다음 동북아 구조조정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

구조조정허브의 발전단계

	구조조정대상기업 (자금수요자)	투자자 (자금공급자)	구조조정주체(기구)
1단계	국내	해외	외국(외국계 PEF)
2단계	국내	국내	한국(CRC, CRV, CRF)
3단계	국내	해외	한국(예 : 한국CRC에 외국인투자)
4단계	해외	국내	외국(예 : 한국투자자가 외국기업에 투자하는 외국 PEF에 투자)
5단계	해외	국내	한국(예 : 한국 PEF가 한국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외국기업에 투자)
6단계	해외	해외	한국(예 : 한국 PEF가 일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중국기업에 투자)

□ 구조조정 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KAMCO 주도)

○ 구조조정 정보센터 구축

-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성공적 부실채권 처리경험을 바탕으로 각국의 정부유관기관, 중앙은행, 부실채권처리기구, 금융기관 등 구조조정 관련기관들과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 KAMCO 주관 서울 기업구조조정포럼(Seoul Corporate Restructuring Forum) 정례화

- 각국의 구조조정 관련 정책 및 감독기관, 공적 및 사적 구조조정기구, 은행, 연구기관들이 구조조정 관련 이슈를 논의

□ 동북아 시장에 구조조정 관련 제도의 수출

- CRC, CRV, CRREITs 등 외환위기 이후 운용 Know-how가 축적된 구조조정 관련 제도의 역내 국가 수출을 적극 추진

(3)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현황 및 문제점

- 파생상품시장은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 금융허브로서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따른 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함
- 기본적인 인프라의 미비가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을 저해
 - 회계, 법률, 신용평가 서비스의 업무능력이 파생상품시장의 급속한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
- 주식, 채권 등 현물시장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기적 수요의 증가로 인해 장내파생상품시장만 기형적으로 발달
 - 장내파생시장은 **KOSPI 200 선물·옵션**이 각각 세계 4위 및 1위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높은 개인비중으로 시장변동성이 큼
 - 장외파생시장은 통화 및 금리 파생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직적인 규제로 인해 복합파생상품의 발전은 미미

추진과제

- 선물시장의 위탁증거금을 차등화하여 거래를 활성화
 - 또한, 외국인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위탁증거금의 외화예탁을 시행
 - * 계약당 주문증거금 : 3년국채선물 180만원, 5년국채선물 280만원
- 국제화 및 신규 파생상품 개발을 통한 역내 리더십 확보
 - 반도체, 원유 등에 대한 선물상품을 개발하여 헤지 수단을 제공
- 신용파생상품 거래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감독 규정 정비

나. 선도 금융업종의 출현기반 조성

◆ 선도 금융업종과 선정 이유

- 자산운용업 :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분야로서 한국 및 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홍콩에 대한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또한 **Mobility**가 커 회사의 이전이 용이하며 금융산업의 가치사슬상 상위에 있어 주식·채권 등 기초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
- 사모펀드(PEF) : 고위험-고수익의 혁신산업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조정수요를 원활히 흡수하고,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인적자원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 리더십을 발휘
- 투자은행(IB) : 혁신산업의 발전 및 기업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발전이 선행되어야 할 분야. 다만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국력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여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 나가야 할 과제

◆ 선도금융부문 출현은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계기

- 외환위기 이후 지배주주가 없었던 제1금융권은 공적자금 투입을 계기로 정부주도하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경험(은행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의 계기 마련)
- 반면, 증권 등 제2금융권은 대주주가 이미 존재하였던 관계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위탁매매 위주의 중소형 증권사들이 다수)
- 상기 자산운용업, IB, PEF의 출현기반이 조성되고 외국금융기관의 진출에 따라 경쟁이 격화될 경우,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전개될 전망

(1) 자산운용업

현황 및 문제점

- 자산운용업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증권, 예탁결제 등 관련 부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산업
 - 싱가포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도 자산운용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금융허브를 구축
- 우리의 경우 자산운용업이 선도 금융분야로서 갖는 잠재력은 큰 것으로 평가
 - 국민연금, 외환보유고 등 자산운용수요가 방대하며, 저금리 추세의 정착으로 적극적인 자산운용 필요성 증대
 - * 국민연금 : 132조원, 외환보유고 2,000억불, 부동산자금 400조원 ('04년말)
 -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경제규모와 자본시장이 상대적으로 커서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유치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 GDP 홍콩 3배, 싱가포르 5배; 채권시장 홍콩 5배, 싱가포르 6배; 주식시장 홍콩 1/2, 싱가포르 2배
- 자산운용업의 선제적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중국의 연금시장에 진출 가능성
 - * 중국은 국가연금 체제로부터 사적연금 체제로 전환 중, 일본은 초고령화 현상이 진전되어 연금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 최근 펀드시장이 크게 발전하고 있으나 장기 기관투자자의 부재, 주식투자 저조 및 군소 펀드의 난립 등의 문제점이 있음
 - * 자산운용시장의 수탁고는 '05.4월말 현재 197.8조원이며, 주식형 펀드의 선호도가 낮고 평균 펀드규모는 작은 특징

추진과제

- ◆ 외국 자산운용사의 적극적 유치와 역외펀드 활성화
- ◆ 퇴직연금제 도입 및 연기금 주식투자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 ◆ 펀드 관련 행정사무 집적지를 육성하여 후방효과 창출

□ KIC를 활용하여 외국계 자산운용사를 적극 유치

- 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의 자산운용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경쟁을 격화시키는 가운데 대형화와 skill 이전을 추구
 - 또한 외국 자산운용사의 한국 진출은 자산운용시장의 확대를 통한 자산 가치의 상승(Korea discount의 해소) 및 고학력자의 고용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최근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Fidelity가 진출하는 등 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나, 다수의 자산운용사를 짧은 기간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계기가 필요
- KIC의 보유자산을 외국자산운용사에 외부위탁시 일정 수 이상의 국내인 고용을 의무화하면서 상업적 주재를 확보
 - 위탁 자산의 규모는 상업적 주재의 정도 및 지역본부의 설치 등 조건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KIC의 CEO의 성과 평가시 수익률과 함께 세계 50대 자산 운용사 중 10~20개를 유치하는 목표 달성 여부를 중요 평가 요소로 선정
- *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외국자산 운용사의 유치를 위해 상업적 주재를 전제로 GIC 자산을 활용(130억불을 38개 자산운용사에 외부 위탁)

□ 국내 자산운용사의 국제경쟁력 강화

- KIC 위탁자산운용을 계기로 세계 유수의 자산운용사들이 한국시장에 진출할 경우 확대되고 있는 국내 자산운용업에서의 시장기회까지 염두에 둘 것으로 전망

* '04년말 현재 국내 48개 자산운용사 중 외국계(지분 50% 이상)는 11개사로 수탁고는 31조원이며, 시장점유율은 16.3%

- 외국사의 진출로 인해 자산운용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면, 본격적인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국내사의 경쟁력도 강화 될 것으로 전망
 - 외국사와의 경쟁을 통해 국내 자산운용인력의 전문성과 **know-how**가 획기적으로 축적되는 학습효과도 기대됨
 - 이를 토대로 우리 자산운용사도 동북아 등 외국의 자산운용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현재 4단계에 있는 자산운용업의 국제화가 5~6단계로 발전)

자산운용업의 국제화 단계

	투자대상	투자자	자산운용사
1단계	국내	국내	국내 (예 :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투자)
2단계	국내	해외	해외 (예 : 싱가포르 GIC가 한국부동산에 투자)
3단계	해외	국내	해외 (예 : 한국자본이 Fidelity펀드를 통해 미국 자산에 투자)
4단계	국내	해외	국내 (예 : 미국자본이 한국 펀드를 통해 국내 자산에 투자)
5단계	해외	국내	국내 (예 : 국내자본이 한국에서 펀드를 만들어 중국 자산에 투자)
6단계	해외	해외	국내 (예 : 미국자본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펀드를 통해 중국 자산에 투자)

□ 비거주자 역외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편의 제공

- 국내 자산운용업의 성장과 외국 자산운용사의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간접투자증권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자산운용에 대한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판매하기 위한 역외펀드* 시장을 개척할 필요

*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설정·등록되는 펀드

- 역외펀드 전용 자산운용사의 설립 자본금 요건 완화 검토
 - 국내규정상 자산운용사의 설립요건은 국내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
 - 역외펀드는 내국인이 아닌 비거주자에게만 판매되는 펀드로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음
 - 역외펀드만을 운용하는 전용 자산운용사의 설립에는 설립 자본금 요건을 하향조정 하여 역외펀드 조기정착을 유도
- 국내에 설정된 역외펀드가 해외증권에 대한 투자를 할 때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 거래소 및 예탁결제기관과의 교차상장 또는 교차매매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 퇴직연금제도(5인 이상 사업장 대상)가 2005.12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되면 자산운용업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

- 퇴직금제도가 기업연금으로 원활히 전환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

□ 연기금 주식투자를 통한 수요기반 확대

- 급증하는 연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 위탁비율 확대

- 국민연금 : 8.7%에 불과한 외부위탁비율을 대폭 확대
- 기타 연기금 : 연기금 투자물에 대한 위탁 확대

□ 자산운용 후선사무 집적지를 중점 육성

- 영국의 에딘버르와 아일랜드의 더블린은 펀드 관련 후선사무 기능(**back and middle office**)을 담당하는 회사들을 많이 유치하여 자산운용업을 위한 행정사무의 집적지로 성장

- 자산운용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고용 창출의 효과 기대

- 우리나라도 자산운용업의 후선사무기능을 담당하는 금융 기관들을 집적화시키는 전략을 추진

- 후선사무회사 설립 시 세제상 유인제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펀드 설립 및 등록의 집적지로 육성하는 계기 마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융 IT업체들의 유치에도 노력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현황

□ 설립위원회 구성('05.4) 및 운영

- KIC 설립업무를 담당할 법적 조직인 설립위원회*가 구성되어 4차례 회의를 개최

* 설립위원회 위원 구성(총 7인)

: 재경부 차관(위원장으로 호선됨)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자산운용협회 전무, 은행연합회 부회장
생명보험협회 전무, 증권업협회 상무,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 임직원 선발

- KIC의 사장(CEO)과 투자담당이사(CIO)는 헤드헌팅사와 공모절차를 거쳐 6월중 임명

□ 전산시스템 구축 및 투자·아웃소싱 전략 마련

- 현재 진행 중인 전산컨설팅을 완료 하고 하반기에 전산 시스템 사양 확정 및 구축작업 개시
-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과 업무협의를 통해 자산운용과 아웃소싱 전략안 초안을 마련하고, CEO와 CIO가 선임시 구체적인 투자전략방안을 확정

□ 법인 설립 및 출범

- 정관작성, 자본금 출자, 법인 설립등기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작업을 마무리 짓고, 7.1일 공식적으로 출범예정

(2)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 활성화 방안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PEF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총아(the new king of capitalism)로 등장하였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구조조정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의 발달 필요
 - PEF는 대규모의 자본이득 발생으로 인한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M&A 시장 활성화, 기업경영의 외부감시기능 강화, 주주중심의 경영정착 등의 순기능을 수행
 - 향후 구조조정시장의 성격이 부실채권정리에서 기업구조조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buyout fund 성격의 사모펀드 육성이 필요한 시점
- PEF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나 인적 자원의 형성 없이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PEF 시장은 외국계만 활발하게 활동한 결과를 초래
 -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뉴브리치, 칼라일 등 세계적인 PEF의 투자대상이 됨
 - 아직도 우리은행을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 및 구조조정기업 매각 등 PEF의 사업기회는 상당한 수준
-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04.12월)을 통해 제도적으로 PEF 설립과 운용이 가능하게 됨
 - 그동안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형성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토종 PEF가 국내는 물론 동북아 구조조정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

추진과제

◆ PEF의 설립과 운용상의 규제를 합리화

◆ 세계 유수의 PEF 지역 본부를 적극적으로 유치

□ 실물경제부문의 경험과 경쟁력을 PEF 운용에 접목

- 간투법 개정 이래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펀드 조성 및 투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맵스자산운용, 우리은행, 산은 등이 추진, 현재 설립된 6개 펀드의 운용 규모는 1.1조원

- 다만, 소매금융 위주의 영업을 하는 은행들이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중기 투자를 하는 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금의 성격상 적합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음

-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 및 펀드에서 경험을 쌓은 한국계 금융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사모펀드들의 출범이 가시화

* Vogo 펀드, MBK 펀드 등

- PEF가 자율성과 은밀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사모펀드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서, 충분한 자금 모집과 track record의 축적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매각대상 기업의 수와 규모의 관점에서 볼 때 외환위기 직후와 비교시 시장기회가 상대적으로 축소다고 볼 수 있으나,

- 아직도 다수의 기업이 매각을 추진 중에 있어 시장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 향후 PEF의 수익 창출과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분석능력과 구조조정기법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
- PEF는 자금 모집 등 재무적 역량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등 기업경영능력이 성패를 좌우하므로 산업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PEF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

□ PEF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펀드 조성 추이를 지켜보면서 간투법상 PEF의 설정 및 운용과 관련한 규제사항 들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간투법상 PEF 설립 · 운용 관련 규제사항(예시)

최소출자금액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개인 20억원, 법인 50억원
대기업집단의 PEF를 통한 계열사 확장 방지	대기업집단이 GP로 쏘는 LP로 30%이상 PEF 투자 시 - PEF는 계열사 주식취득 금지 - PEF가 타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할 경우 5년 이내 매각 의무화 -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의 동일 PEF 한도(10%) 설정

□ PEF의 지역내 허브 구축을 위한 선별적 해외사 유치

- 세계 유수의 Private Equity Fund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전략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갖는 지역본부가 한국 내 소재해야 함
- 역내 리더십 확보를 위해 상징적인 홍보활동과 실질적인 **Private Equity** 업체들의 추가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
 -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한편, 개별접촉을 통해서도 Top-tier의 PE 업체의 진출을 적극 추진

(3) 투자은행 육성

현황 및 문제점

-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상 직접금융시장의 발전과 투자은행의 출현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
 - 고위험 - 고수익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위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금융기능의 부재로 산업과 금융의 **mismatch** 현상 발생 우려
- 발행시장에서의 기업자금 조달관련 업무는 투자은행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유가증권의 인수 (underwriting), 증권 발행(IPO), M&A** 관련 업무를 수행
 - 따라서 직접금융시장의 발전은 투자은행의 육성 또는 발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은행권은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대형화와 수익성을 확보한 반면, 제2금융권은 구조조정이 부진하여 대형화를 이루지 못하고 수익모델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자본금 규모*에서 국내증권사는 국내은행 및 외국계 투자은행에 비해 현저히 낮음
 - * 삼성증권 1.6조, 국민은행 9.1조원, Goldman Sachs 25.1조원('05.2)
 - * 전국 점포수 비교 : 증권 1,467개, 은행 6,429개(국민은행 1,125개)
 - 수익성이 낮은 위탁 수수료 위주의 **brokerage** 업무에 집중하여 43개 증권사의 순익이 1개 은행의 순익에 미치지 못함
- 향후 투자은행 육성을 위해서는 증권업계의 구조조정과 대형화를 통해 대형금융기관이 투자은행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

추진과제

- ◆ 구조조정을 통한 증권업계의 대형화와 전문화 유도
- ◆ 국제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한 단계별 전략 실행

□ 구조조정을 통한 증권업계의 대형화 및 전문화

- 증권산업 구조조정은 대형화, 전문화 등 차별적인 시장 구조의 개편을 목표로 함
- 차별화된 전문적 역량의 보유여부가 개별 증권회사의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되도록 유도

□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형성

- 증권사의 대형화를 1차적으로 달성한 이후 국제적으로 진출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토록 유도
- 지점형태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형화된 우리 증권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외국금융기관과 일차적으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합작회사 설립 또는 M&A하는 방안도 고려

한국형 투자은행의 국제화 전략



노무라 증권 사례 연구

- 노무라 증권은 '80~'90년대 중반까지 글로벌 투자은행을 지향하며 해외시장에 활발하게 진출을 시도
 - 해외거점을 확대하고 최고 수준의 외국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글로벌 투자은행으로의 영역 확장에 주력
 - '98년 아시아 외환위기사 일본기업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외국계 증권사가 대거 진출
 - 노무라 증권은 해외부문의 적자와 일본 구조조정시장의 방어를 위해 국제화 전략을 수정하고 국내시장으로 회귀
- ⇒ ①해외 네트워크 구축에 실패하였고, ②일본내 자본시장 발전이 수반되지 못한 점이 국내시장으로의 회귀요인으로 지적됨
- 현재 노무라는 일본 국내시장에서는 선도 증권사 역할
 - 소매영업, M&A 중개에서 일본 내 1위
 - 국제업무는 일본기업의 해외채권발행 주선 등에 한정
- 정책적 시사점
 - 강력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 없이는 투자은행의 출현이 어려움
 - 글로벌 투자은행을 성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국내업무와 국제적 틈새시장에 주력하면서 잠재력을 키울 필요

3. 국제적 Network의 강화

가. 증권선물거래소(KRX)의 국제화

-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확산시켜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거래소로 발전시키는 것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거래비용의 인하와 거래소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 우리나라의 증권거래 비용은 0.4~0.8%로서 미국 0.25%, 홍콩 0.44%보다 높은 수준
- 자본시장에서 완성된 허브의 모습은 외국기업이 국내증시에 상장하여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이 가능한 단계 (아래표 6단계)
 -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증시투자가 가능한 단계 (아래표 4단계)
 -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등 자본시장의 국제화(아래표 5,6단계)를 이룩할 필요

자본시장의 국제화 단계

	발행자 (자금수요자)	투자자 (자금공급자)	시장(허브판단기준)
단계1	국내	국내	국내(내국기업 국내증시 상장)
단계2	국내	해외	해외(내국기업 해외증시 상장)
단계3	해외	국내	해외(내국인 해외증시투자)
단계4	국내	해외	국내(외국인 국내증시투자)
단계5	해외	국내	국내(외국기업 국내증시상장)
단계6	해외	해외	국내(외국기업이 국내증시에 상장하여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

(1) 외국기업의 국내거래소 상장촉진

- 국내 투자자의 해외증권 투자를 흡수하고, 외국 우량기업의 국내 상장을 통한 국가위험의 완화, 국내 증시의 국제화 등을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거래소 상장 필요
- 상장된 외국기업을 통해 외국시장과 산업에 관한 고급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효과

(2) 해외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

- 해외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는 거래소간 국제적인 경쟁에 대비하고, 해외 자산운용사의 국내진출 유인 제공
 - 싱가포르 등 경쟁국과는 달리 현재 해외거래소와의 전략적 연계 실적이 전무한 상황

싱가포르 및 동경거래소의 주요 제휴내용

	제휴파트너	제휴 내용
SGX (싱가포르)	ASX (호주증권거래소)	세계최초의 동시거래 연계. 투자자들은 자국의 브로커를 통해 상대국의 증권거래 가능
	CME (시카고상업거래소)	세계최초의 선물거래 연계
TSE (동경)	ASX (호주증권거래소)	TSE 거래 라이선스가 없는 일부 호주 증권사들도 200여개 기업주식 직접거래 가능
	SSE (상하이증권거래소)	양국 기업들의 양국 증권거래소에의 동시 상장 유도

나. 자본시장 인프라 수출을 위한 해외협력 추진

주요 역내 개발도상국의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선도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역내 금융거래 및 인적교류를 활성화

□ 우리나라 자본시장 인프라의 경쟁력

- 자본시장의 발전 및 개방과정에서 각종 증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증권전산, 증권금융 등의 인프라를 구축
 - * 태국증권거래소 및 예탁결제기관의 요청에 따라 태국증권시장에 증권대차 제도가 효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을 위한 컨설팅 제공 예정
-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자본시장제도와 전산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적합한 측면이 있음
 - 경제규모, 자본시장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발전 경험과 운영 노하우가 비교우위를 가짐
 - 또한 장기에 걸쳐 금융인프라가 형성된 선진국과 달리, 단기간에 정부 주도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경험을 보유
- 강점부문(IT경쟁력, 자본시장 제도 정비)을 이용한 해외 협력을 통하여 금융허브 기반 구축에 활용
 - 경쟁력을 보유한 IT부문에 금융제도를 결합한 자본시장 인프라가 수출되면 양국의 자본시장의 연계도가 높아지고, 선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

자본시장 인프라 해외진출 경쟁력 진단(SWOT분석)

강점요인(Strength)	약점요인(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분야의 경쟁력 확보 - 주식·파생상품 시장 성장 - 자본시장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 정합성 - 자본시장 모델로서 한계 - 자본시장의 상대적 미성숙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에게는 선진국 제도보다 상대적으로 적합 - 개도국 자본시장 인프라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 싱가포르 및 상해 등 기존 허브와의 경쟁 - 초기 수익성 확보 어려움

□ 향후 추진방향

○ 체계적·패키지 형태의 접근 추진

- 자본시장 인프라는 각종제도, 전산시스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의 해외협력 마스터 플랜 추진 필요

○ 국제협력사업단(KOICA)의 예산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정부 지원방안 강구

* 2004년도 예산지원 실적

- 아세안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 : 41백만원(8개국 13명)
- 독립국가연합(CIS) 유가증권예탁 및 결제제도 지원 : 61백만원(8개국 16명)
- 초기단계의 해외진출은 홍보, 자문 등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산지원 등이 필요

○ 증권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해외진출 대상 제도와 시스템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① 해외수요 조사, ② 성공가능성이 높은 대상 국가 선정, ③ 전문가 파견 및 초청연수 등 무상지원, ④ 지원대상국에 대한 세부적인 컨설팅 및 지원방안 수립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다. 국제금융계와의 협력체계 강화

국제금융계 및 주한 외국 금융기관과의 대화채널을 확대,
국내 금융제도에 대한 상시 협의체제 마련

- 국제금융계의 유력인사로 국제자문단을 구성하여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글로벌 차원에서 점검하고 추진과제를 보완
 - 금융허브 정책에 선진 금융계 권위자들의 시각이 반영되어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
 - 아울러 국제금융계에 한국 금융시장의 혁신적인 변화 양상을 홍보하는 적극적인 역할 부여
-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혁신적인 시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
 - 외국계 금융기관 및 AmCham, EUCCK 등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시장 선진화와 관련된 건의사항은 적극 반영
- 금융허브지원팀을 관계부처 공무원, 금감원 및 민간금융기관 직원으로 구성하여 조세·금융·노동 분야의 전문적 서비스 지원
 -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영업에 따른 애로사항을 **one-stop**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진출회사별 **Project Manager**제도 도입 추진
- 유치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대상 지역별·금융기관별 **IR** 계획 수립·시행

라.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 추진

금융허브의 비전과 추진의지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를 통하여 컨센서스 및 추동력 확보

- KIC, 산은, 수은, KAMCO 등과 공동으로 국제 세미나 개최 (금년 10월경)
 - 국제세미나 개최와 동시에 국제자문단 출범을 추진
 - 금년 7월 KIC 출범 및 금융전문대학원 육성 지원과 연계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의 CEO급 인사 또는 아시아 지역본부장 위주로 초청
-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11월) 및 재무장관 회의(9월)를 적극 활용
 - 각국 정·관·금융계 고위인사를 상대로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 적극 홍보
- 금융허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현상논문공모 실시(금년 하반기)

V. 역동적 추진체계 구축

-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금융허브회의”를 신설하여 추진실적 점검 및 금융허브전략 평가 및 보완
-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 수행
 - 금융허브회의를 통해 마련된 금융허브 추진전략 및 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허브추진협의회”를 설치(대통령훈령 제정)
 - 정책 주제별 연구를 위한 “Project Team”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국제금융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 및 세계 우수 자산운용사의 전문가들을 위주로 “국제자문단”을 운영
 - 관계부처 공무원, 금감원 및 민간금융기관 직원들로 “금융허브지원팀(센터)”을 구성하여 외국계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처리 지원

